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11. part1 제 85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국토부 ,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3
2. 국민 · 바른 , '6 대 중점 처리 법안 ' 공동선정..." 與 , 13 일까지 답 없으면 중대 결심 " 4
3. 규제프리존법 , 서비스발전법 깨울 생각없는 정치권 5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국가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폐지 목소리 커진다 6
2. 남경필 " 수도권규제 철폐 , 나부터 앞장설 것 " 7
- 3-1.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 이다 _ 첨단산업선도 8
- 3-2.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 이다 _ 경쟁력 갖춘 초강대도시 육성 8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 盧 정부와 다른 ' 文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10
2.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파괴 11

1. 국토부,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앙일보

02

주요내용

■ 1 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건설사업 예타 평가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 핵심은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을 올리는 방안
- 지난달 31 일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 기재부의 예타 조사
 -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또는 기술성 분석) 을 총괄적으로 진행
 -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른데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
 - 지역균형발전 분석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상태를 방지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표 (IRIO) 를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낙후도의 개선 수준을 분석해 평가에 반영
 - 계층화 분석법 (AHP) 을 통해 계량화된 지표 값을 도출해 종합점수를 내는데 0.5 이상이 나와야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봄
 - 건설사업의 경우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적 20~35%, 지역균형발전 25~30%
-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비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
 -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춰진 대도시,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 농어촌 소외지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 씩 상향
- 운영일 국민의당 의원
 - 예타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 포인트 상향해 35~40% 로 조정해야 함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AHP 평가 항목 가중치를 어떤 항목에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쟁점 사안이 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경제성 없이 무분별하게 도로나 시설 등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SOC 예산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시사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가중치 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지역발전등급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1556931#csidxc e54d159ff3612bb4eb563ce0e41cff>

2. 국민·바른, '6 대 중점 처리 법안' 공동선정..." 與, 13 일까지 답 없으면 중대 결심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중앙일보

02

주요내용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 일 '6 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을 공동으로 선정하며 정책연대의 시동

- 오는 13 일로 예정 돼 있는 국회의장·4 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양당의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 을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내놓으며 대야 압박 수위도 높였음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
-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
 -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부정채용 금지법) 등 6 가지 법안
-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
 -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의 법안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6 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
 -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국회인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대적 양당제의 극단적 주장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들을 제시
 - 그동안 4 당 원내대표 회동이 수차례 있었지만 여당 원내대표는 협조만을 요청했지 정작 야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사안이 많으며 오늘 자리를 통해 우리는 민주당과 정부에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
 - 오는 13 일 국회의장과 4 당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 답을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양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
 - 중대 결심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 등에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
-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 이전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주장을 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있음
 - 그래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우리가 이같은 발표에 나선 건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여당의 협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
 -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

시사점

6 대 중점처리 법안 중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법안이며, 특히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080269>

3.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깨울 생각없는 정치권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K 뉴스

02

주요내용

■ 11 월 정기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집권 여당이 " 중재안을 달라 " 며 야당에 공을 넘긴 가운데 야당도 정계 개편으로 법안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 일 매일경제와 통화
 -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바른정당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지만, (바른정당 분당으로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동 법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 이는 지난 3 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6 개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
- 바른정당 분당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정책연대의 동력이 잃은 것이 이유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 서비스발전기본법 중재안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
- 지난 3 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 재벌 특별법 ' 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음
 -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 많으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독소 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제안
-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100 대 과제를 위한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

- 민주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11 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그냥 한 말일 가능성이 높음
- 동력을 잃은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
 - 지난 정부에서 집권 여당으로 두 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 한국당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통과가 필요
 - 하지만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로 두 법을 추진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목소리가 작아졌음
 - 오히려 정계 개편 소송들이 속에서 한국당은 국회 입법 국면은 뒷전에 밀려난 모양새
- 야당 내부에서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법 취지와는 달리 산업 발전에 효과가 없다는 무용론도 나옴
- 또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이라는 수요에 따라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당에서는 법안 통과나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67 개 관련 법률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나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사점

6대 중점처리 법안 중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법안이며, 특히 자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8032&year=2017>

1. 국가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폐지 목소리 커진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박순자 “수도권 - 비수도권 이분법 논쟁서 벗어나야”, 김부겸 장관 “국가 경쟁력 도움 안된다는 지적 동의”, 여야 의원·남 지사, 공간혁신·초강대도시 육성 강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적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수도권규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도권 -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초강대도시’ (초광역경제권) 로 정책적 전환, 시프트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 라며 남 지사와 맥을 같이하는 주장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도 못 만들고 수도권의 효과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
 - 수도권을 억누른다고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에도 동의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문제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수도권 양보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고 단서
 - 초강대도시와 관련, (수도권을) 뉴욕과 도쿄와 바로 등치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수도권을 초강대도시로 육성하려면 수도권이 이기심을 버려주어야한다고 당부
- 여당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남경필 지사도 수도권 폐지를 주창
 - 지난달 26 일 대통령 -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 -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
 - 연일 수도권 규제 폐지와 초강대도시 육성을 강조
-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광주갑)
 - 지난달 19 일 경기도 국감에서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폐지안)’ 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남 지사가 더욱앞장설 것을 요구
-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이우현 도당위원장 (용인갑)
 - 국토부 국감 등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

시사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비수도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지속 필요

출처

<http://seoul.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9390>

2. 남경필 " 수도권규제 철폐 , 나부터 앞장설 것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노컷뉴스

02

주요내용

■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

- 남 지사는 7 일 경기도 월례조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그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
 - 국토균형발전 달성을 목표로 한 수도권 규제가 상당수 기업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등 규제의 목적을 잃어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
 - 국가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모두 달성해야 하는데 , 지금 정책은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있음
 - 이를 모두 이룰 수 있는 방향은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것
- 수도권 규제가 없다면 지방과 수도권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남 지사는 ' 이익 공유 ' 의 가치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
 - 수도권의 규제 철폐를 통해 나타나는 많은 이익 , 성장의 과실을 수도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지방과 잘 공유함으로써 함께 균형발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향제도입 제시
- 옛날처럼 규제만해서는 답이 없다며 규제철폐와 이익 공유의 균형이 잡히도록 지혜를 발휘할 때고 , 도지사인 제가 앞장서겠다고 주장

시사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폐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비수도권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지속 필요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72984#csidx8a1d1720b15dcdf9d66a5f1650b4a33>

3-1.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 이다 _ 첨단산업선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로 4차산업혁명 성공을 꼽으면서 수도권 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12 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과학기술로 대한 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경기도’ 라는 비전을 담은 경기도의 5개년 (2018~2022년) 과학기술진흥전략을 발표
 - 도는 5개년 계획에 ‘경기도형 4차산업혁명 브랜드 창조’, ‘첨단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미래 인재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 3대 목표를 담으면서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침
- 이처럼 도가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는 까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업 유치에 필수이기 때문
-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라는 걸림돌로 공장설립 제한, 토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수한 ‘자본’ 과 ‘인재’ 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를 의미
-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까지 맞물리면서 수도권은 그야말로 각종 제재가 겹쳐 있는 상황
- 실제 수도권에는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시적용도’ 가 전 국토의 7.2%에 불과하다. 이는 곧 높은 지가로 이어지는데다 균형발전으로 공장 신·증설까지 막히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로의 투자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음
-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
 - 수도권 투자를 계획했다 포기하고 해외에 투자한 업체 (2009~2014년) 는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또 국내 62개 기업은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 시기를 놓쳐 3조 3천 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1만 2천 5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
-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 이미 구축된 광고·판교·북부 테크노밸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대선후보 당시 ‘경기남부에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등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데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 북·동부 첨단테크노밸리 조성 등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추진’ 을 포함시키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수도권 규제를 적용했던 여러 나라에서 규제를 폐지했듯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됨
 - 수도권 규제가 폐지된다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선도할 수 있을 것

출처

<http://seoul.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5274>

3-2. 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 이다 _ 경쟁력 갖춘 초강대도시 육성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1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경기도가 30여 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를 육성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수질 보호를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수도권 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
- 그러나 이 같은 규제들은 비수도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 **지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
 - 2009~2014년 수도권에서 공장 증설 불가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신 지방을 택한 기업은 6개에 불과
 - 그러나 4배가 넘는 28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투자 자체를 포기, 결국 지방으로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 **이처럼 수도권 규제가 제구실하지 못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폐기하는 상황**
 - 먼저 지난 1960년대 공장개발허가제, 사무실개설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은 갈수록 런던이 쇠퇴하고 국제적 중심지의 기능마저 약화하자 1980년대 초 수도권 규제를 폐기
 - 이후 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 유치 등 런던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고,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런던 테크시티 (Tech City)’ 개발 계획을 발표
 - 테크시티 구축을 위해 경제적 투자와 함께 글로벌 IT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테크시티는 5천 개 이상의 창업기업들이 밀집, 기술창업 클러스터로 성장해 영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어나가고 있음
 - 프랑스 역시 공장설립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정책이 파리경제 침체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면서 1995년 파리 중심을 제외한 수도권 사무실·공장 허가제 폐지, 2003년 용적률 초과 부담금 폐지 등 수도권 규제를 차레대로 폐기
 - 이와 함께 파리를 유럽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는 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을 진행
 - 도쿄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자 일본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
 - 도쿄보다 수도권 반경을 넓혀 광역도시권을 설정, 해당 구역에는 각종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 핵심지역으로 육성 중
- **이처럼 규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수도권은 발전을 거듭하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런던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파리와 도쿄는 각각 3위, 4위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11위에 그치는 등 매년 10위권 밖을 머물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 규제 폐지 시 서울은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 현재 도는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도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이들의 경제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하며 3천 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도는 수도권 규제 폐지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비롯,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 것으로 전망**
- **경기도 관계자**
 -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성장활동에 제약을 가하면서 산업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약화하고 있음
 - 런던과 파리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증명했듯 경기도 역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때 무한한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봄

출처

<http://seoul.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3311>

시사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해외투자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다른 측면에서는 비수도권의 투자여건이 해외투자 보다도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그간 비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설 등 투자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 또한 수도권 규제폐지와 관련된 사례 역시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청사 및 일자리 지방이전정책 등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의 기초는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시사점도 확인

1. '盧 정부와 다른' 文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끝나지 않은 입법 전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 20대 국회 2년 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기로에 놓여있음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지방산업의 위축을 초래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
- 충북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비중은 지난 9월 기준 49.6%가 밀집
 -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31.5%, 1995년 45.3%, 2015년 49.5%로 각종 정책과 법령 시행에도 인구 집중은 심화
 - 전국 20대 순위 대학 80%,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 예금액 70%, 의료기관 52%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경제·후생지표도 수도권에 쏠려있음
 - 반면 비수도권인 지방도시들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있음
 - 인구노후도 2.0 이상인 지역을 '소멸가능지역'으로 구분하면 2015년 인구 기준 전국 229개의 시군구의 36.2%, 3천 492개의 읍면동 중 40%가 소멸가능지역으로 분류
-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비수도권 도시들은 소멸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음
-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8일 법률안 심사를 예고
 -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른바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거나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음
-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은 수도권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지역 현안
-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완화·폐지하는 법안은 모두 7건
 -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박정(파주을) 의원, 한국당 송석준(인천)·정유섭(인천부평갑)·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
 -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면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 정비발전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음
-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과 한국당 이현승(부산진을)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는 별도로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했음
- 정치권 관계자
 - 노무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능 분산형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정책 기조
 -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인한 주민 삶의 질 하락,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

시사점

수도권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영향과 지방소멸 등의 위기 심화 등에 관한 논리적 대응 필요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4495>

2.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파괴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1.12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충북일보

02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했으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진의에 의심, 수도권 규제완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구체화
 -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음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
-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 에 불과한데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음
 - 상장회사의 72% 가 집중, 전국 20 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 도 수도권에 몰려있음
-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는 고사 직전의 위기상황
-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별 배치와 지역 인력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5 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
-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떠한 명분도 설리도 찾기 어렵다. 그저 비수도권 몰락을 유도하는 지방 죽이기 입법이나 다름없음

시사점

수도권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영향과 지방소멸 등의 위기 심화 등에 관한 논리적 대응 필요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14495>